

보 도 설 명 자 료

(’22. 10. 21)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전체 원전 중 일부에 불과한 월성 1호기 가동여부만으로
탈원전의 한전 적자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
이며, 매우 부적절함

(경향신문 10.20일자 「“월성1호기 가동했어도 전력도매가 1.5원만
하락”... 이런데도 탈원전 탓만」, 10.21일자 「민주당 “월성 1호기
가동해도 한전 적자 해소 미미... 정부 주장 거짓”」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월성 1호기 가동을 전제하더라도 '22.7.7 기준 SMP는 158.04원/kWh으로 미가동 시 실제 SMP 159.55원/kWh 대비 불과 1.51원만 감소되어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기사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22년 최고 전력부하일인 7.7일의 실적 SMP는 159.55원/kWh, 최저 전력부하일인 5.1일의 실적 SMP는 133.68원/kWh이며, 해당일에 월성 1호기가 가동한다는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7.7일은 158.04원/kWh, 5.1일은 132.18원/kWh으로 산출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영향은 원전 조기폐쇄는 물론이고, 원전 이용률 변화, 신규원전 건설 지연, 高원가 전원비중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17~'21년 5년간의 탈원전으로 들어간 추가 비용은 '16년 원전 발전량 비중 유지 가정 시 10.6조원, '12~'16년 평균 원전 이용률 유지 가정 시 11조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1·2호기 준공 지연 등 고려 시 13조원으로 분석한 연구사례가 있음

□ 동 보도와 같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영향을 월성1호기 가동 여부 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명백히 그 영향을 축소하는 것임

□ 정부는 한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 정책, 국제연료가격 급등, 요금 조정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① 탈원전 영향에 따라 LNG, 재생에너지 등 高원가 전원 비중이 늘어나는 에너지믹스 전환이 국제 연료가격 급등과 맞물려 한전 적자를 증폭시키는 시발점으로 작용

* LNG의 비중이 낮았을 때 보다 LNG 가격 증가폭 대비 전체 비용 증가폭이 더욱 확대

○ 원전 이용률 저하, 원전 조기 폐쇄, 건설 지연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16년 30%에서 '21년 27.4%로 2.6%p 감소('17~'21년 평균 26.5%)

○ 노후석탄 조기 폐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석탄발전 감축으로 석탄 발전량 비중도 '16년 39.6%에서 '21년 34.3%로 5.3%p 감소

○ 감소된 低원가의 발전량은 고가의 LNG 발전으로 대체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각각 '16년 22.4%에서 '21년 29.2%로 6.8%p, '16년 4.8%에서 '21년 7.5%로 2.7%p 증가

② 국제 연료가격 급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에 매우 취약해진 구조하에서 러-우 전쟁 여파로 작년 1분기 대비 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4배 이상 폭등함에 따라 전력공급 비용이 급등하고, 적자가 급격히 확대

* '21.1Q 대비 '22.9월 : (LNG) 4.3배(10→43\$/MMBtu), (유연탄) 4.9배(89→439\$/톤)

③ 아울러,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된 것도 한전의 적자를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

* '21년 연료비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조정기회 중 4번 동결

※ 문의 : 전력시장과 강경택 과장(044-203-3910) / 류창환 사무관(3911)